



# 창조경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

창조경제분과·KDI

국민경제자문회의 제2차 회의 보고자료  
2013년 8월 29일



## » 박근혜 정부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'창조경제' 제시

- 과거 추격형 발전 모형의 한계를 넘어서, 개개인의 창의와 수요 중심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
- 창조경제는 “국민 개개인의 창의가 실현되는 경제”
  - 개개인의 창의가 집단지성으로 발휘되면 1+1이 2가 아닌 100이 될 수 있음
    - i-Phone 사례
  -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 구현과 개방·공유·협력의 문화 필요

## » 현 상황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점검하고 활성화를 위한 보완 방향 모색 필요

- 정부출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발표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점검
- 이를 바탕으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완방향 제시



# 목차

## I. 창조경제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

### ▪ 표적집단면접 (Focus Group Interview) 결과

## II. 창조경제 활성화 제언

1. 민간 기업 선도의 창조적 협력 관계 구축
2. 융합형 시범 프로젝트 추진  
– Korea Healthcare 3.0
3. 국민 생활 속의 창조적 학습 활성화

# 창조경제 인식 조사 결과



## 높은 공감

- 창조경제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에 공감
  - 저성장·일자리 등 현실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에 공감

“ (벤처기업) “산업화에서 정보화로 흐르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”  
(대기업) “글로벌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창조경제 아젠다에 크게 공감”

## 중간 기대감

- (긍정적 인식) 특히 창업준비생 그룹은 긍정적
- (부정적 인식) 창조경제를 위한 제반 여건이 부족하고, 이에 대한 정책 미흡

“ (창업준비생) “적합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고,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듯”  
(이노비즈기업) “펀드 등 정책지원을 현장으로 전달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부족”

## 낮은 체감

-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인식하는 경향 (심리적 관성 작용)
- 정책의 우선순위가 불명확

“ (취업준비생) “관심은 많으나 현실에서는 안정된 직장이 우선”  
(중소기업) “정책이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...”

### 조사 개요

1. '13.6.5 정부발표 “창조경제 실현계획”의 6대 전략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한 인식조사
2. 7개 그룹 표적집단면접(그룹당 5~8명): 1)대학생/창업지망생, 2)벤처기업, 3)이노비즈기업, 4)중소기업, 5)대기업, 6)외국계기업, 7)정부 부처



## 경제 주체의 인식

창조경제의 필요성과  
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

- 1 창조경제는 정부 주도라는 인식
- 2 창조경제 실체를 잘 모르겠다는 인식 존재
- 3 국민이 주체라는 인식 부족

## 정책적 시사점

개념과 방향성 논란보다는 구체적  
과제 발굴·실천과 성과 공유 필요

- 민간기업 선도의 창조적 협력관계 구축
- 선도적 융합형 시범 프로젝트<sup>1</sup> 추진 및 성공사례 축적
- 창조경제의 주체로서, 국민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참여의식 함양

<sup>1</sup>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(미래부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);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(7.30) (금융위, 특허청, 중소기업청, 국가지식재산위원회); Korea Healthcare 3.0 (자문회의 제언)



# 목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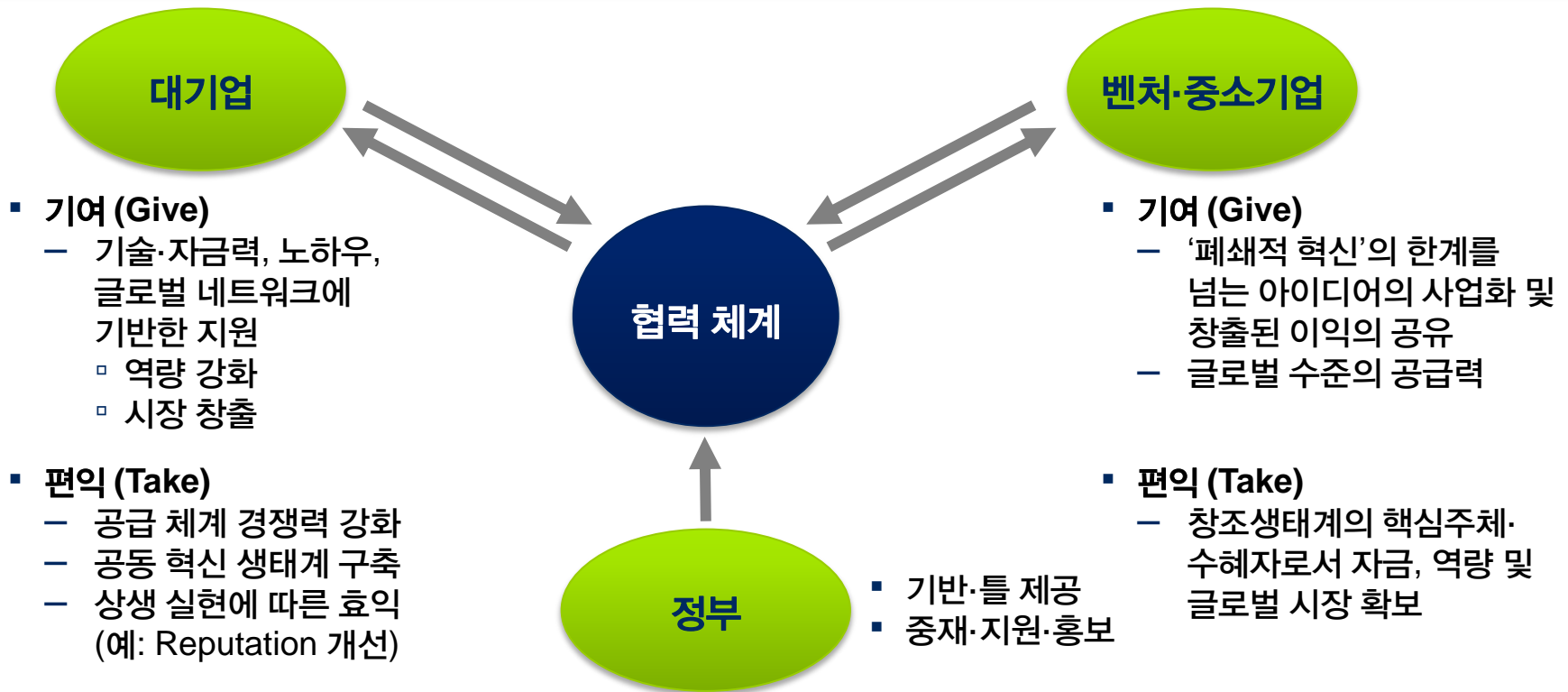
## I. 창조경제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

- 표적집단면접 (Focus Group Interview) 결과

## II. 창조경제 활성화 제언

1. 민간 기업 선도의 창조적 협력 관계 구축
2. 융합형 시범 프로젝트 추진  
– Korea Healthcare 3.0
3. 국민 생활 속의 창조적 학습 활성화

# 협력 체계의 기본 구도



협력체계의  
성공적 구축을  
위한 핵심요건

- Win-Win 관계에 바탕한 지속가능성 (‘Sustainability’)
-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지향성 (‘Competitiveness’)
- 조기 성공 실현을 통한 가시성·신뢰성 (‘Visibility’)
- 기타 사업·영역으로의 확산가능성 (‘Scalability’)

※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『**민·관 창조경제 추진 협의체**』 구성·운영 필요



방향

영역

협력 과제 제언

역량 강화

인재

- 1 창조 인력 육성 및 인재 교류 활성화
  - 전문 실무 교육 플랫폼을 통한 대기업·전문기관의 선도적 노하우·역량 전수

기술

- 2 기술 공유·이전·협력 활성화
  - 기업·공공기관간의 기술 거래 활성화
  -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·협력 강화

시장 창출

열린 생태계

- 3 중소·대기업 공동 생태계 비즈니스 육성
  - 대기업이 상품·서비스 플랫폼과 자금·역량 제공, 벤처·중소기업이 혁신 주도

글로벌 성장

- 4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강화
  - 중소기업 e-Marketplace 구축
  - 대기업의 해외 인프라·판로 공유

# 1 창조 인력 육성 및 인재 교류 활성화



## 현황 및 필요성

- 중소기업간의 경쟁력 격차 심화<sup>1</sup>
  - 중기 고용 비중: 87%
  - 대기업 대비 생산성: 35%
  - 대기업 대비 임금: 62%
- 現 중소기업 지원 활동들의 제한적 실효성·참여 범위
- 대기업·전문기관의 선도적 노하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'전문 실무 교육 플랫폼' 활성화 필요

## 협력 모델 제언

### 1. '중소기업 아카데미' (가칭) 설립

- 국제적 수준의 기업 실무 역량 교육 (예: 해외마케팅)
- 이론 학습 + 현업 적용을 통한 성과와 역량 동시 제고
- 대학 인프라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 체계 구축
- ※ 해외 사례: 일본의 SME University
- ※ 국내 사례: 현대차 지식기부 프로그램 등

### 2. '노하우 공유 플랫폼' 구축

- 중소기업간 개별 매칭을 통해:
  - (1) 대기업 전직 임원이 중소기업에 노하우 제공
  - (2) 전문기관이 맞춤 자문 제공
- ※ 해외 사례: 미국 중기육성센터 SCORE 민간자문단
- ※ 국내 사례: 전경련 경영닥터제

### 3. Externship (창의 인재 순환) 활성화

- 대기업 인재의 벤처·중소기업 투입 (복귀 기회 보장)
- ※ 해외 사례: Rhino Food, Parks Forum 등 다수

1 각각 통계청(2011년 기준), 한국은행(직원당 부가가치, 2010년 기준), 고용노동부(2012년 기준)에서 인용

# 1 창조 인력 육성 및 인재 교류 활성화 – 일본·미국 사례



## 일본 SME University



### 목표

- 중소기업의 인재·인프라·자금·정보 지원을 위해 1992년 도입

### 운영 기관

- 경제통상산업부 (METI) 산하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 (SMRJ)

### 운영 모델

- 대상:** 중소기업 관리자, 창업준비자, 중소기업 지원 기관 근무자
- 강사:** 중소기업 역량진단 전문가, 현직 경영자, 변호사, 세무사 등
- 프로그램:** 일반 경영관리, 문제해결, 자금 운용, 마케팅·영업 및 산업별 특화 교육
- 운용:** 민간교육기관 보다 저렴한 수강료 (국고 보조금 지원)

### 성과

- 전국 9개 SME University 운영 중
- 개교 이래 수강신청인원이 항상 정원 초과

## 미국 퇴직경영자 자문단



- 벤처·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지도 활성화 목적으로 1964년 도입

- 연방정부 산하 중소기업 육성센터 (SBDC) 주관

- SCORE<sup>1</sup>** (퇴직경영자 자문단): 중소기업 종사자 대상으로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

- SBDC:** SCORE 표준운영모델에 따라 전문가 심사·등록, 자문 신청 접수, 전문가 매칭, 자문 서비스의 질 관리 감독

- 13,000여명 규모의 자문단 활동 중
- 도입 후 천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자에게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

1 SCORE: 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

## 2 기술 공유·이전·협력 활성화



### 현황 및 필요성

- 기술개발의 새로운 가치창출 모델 확산
  - From: 자체 R&D 중심
  - To: 아웃소싱, 기술구입 확대
- 기업·공공기관간의 지식자산 공유·이전·협력 기회 존재
  - 미활용기술·휴면특허 거래
  - 지식재산 기반의 신산업 창출
- 과거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한 실효성 강화·지속성 확보 필요
  - 예: 과거 정부의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 정책

### 협력 모델 제언

#### 1. 지식자산 거래 활성화

- 대기업이 벤처·중소기업의 특허·기술을 정당한 대가에 인수하여, 벤처·중소기업에 중간회수 기회 제공
  - 대기업·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·기술을 중소기업에 양도, 활용 노하우에 대한 교육 제공
  - 정부는 대기업 참여를 독려 (예: 동반성장 가점 부여) 지속가능성을 위한 IP 거래시장 인프라 확충 지원
- ※ 해외 사례: 노키아 Innovation Mill
- ※ 국내 사례: 삼성 테크윈 등

#### 2.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강화 (별도 국정과제로 추진 중)

- 응용기술 및 기초 연구 강화
  - 중소기업 지원·협력 강화
- ※ 해외 사례: 독일의 막스플랑크 재단·프라운호퍼 재단

### 3 중소·대기업 공동 생태계 비즈니스 육성



#### 현황 및 필요성

- 산업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 창출의 축 이동
  - From: H/W, 제조
  - To: S/W, 콘텐츠
- 개방형 생태계 내 n:N 방식의 대·중소기업 공동 혁신으로 'Win-Win' 가치 창출 가능
- 협업 모델 및 정책 방향의 근본적 변화 필요
  - S/W·콘텐츠 부문의 폐쇄적 혁신은 대부분 실패 (예: 피쳐폰 콘텐츠 서비스)
  - 정부 주도적, 일방적 정책 추진 역시 실패 (예: WIPI)

#### 협력 모델 제언

- 대기업들의 상품·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, 벤처·중소기업이 참여하는 '개방형 생태계' 조성
  - 대기업: 컨소시엄 투자 방식으로 자금·역량을 벤처·중소기업들에 제공
  - 벤처·중소기업: 생태계 내 혁신 아이디어 제공 및 사업화
  - 정부: 초기 활성화 지원, 대기업 참여 독려 (동반성장 가점 부여 등), 객관적 기금 운영 (투자 방향 설정, 집행 감독)
    - ※ 해외 사례: 애플 iFund, 블랙베리 파트너스 펀드
    - ※ 국내 사례: 삼성 기업생태계 조성 프로그램, SK ICT 융합사업 투자 등
- 대기업과 벤처·중소기업간의 혁신 성과 공유를 통해 지속성 확보
- 하이테크, IT에서 시작하여 기초 과학, 바이오 등으로 협력 영역을 확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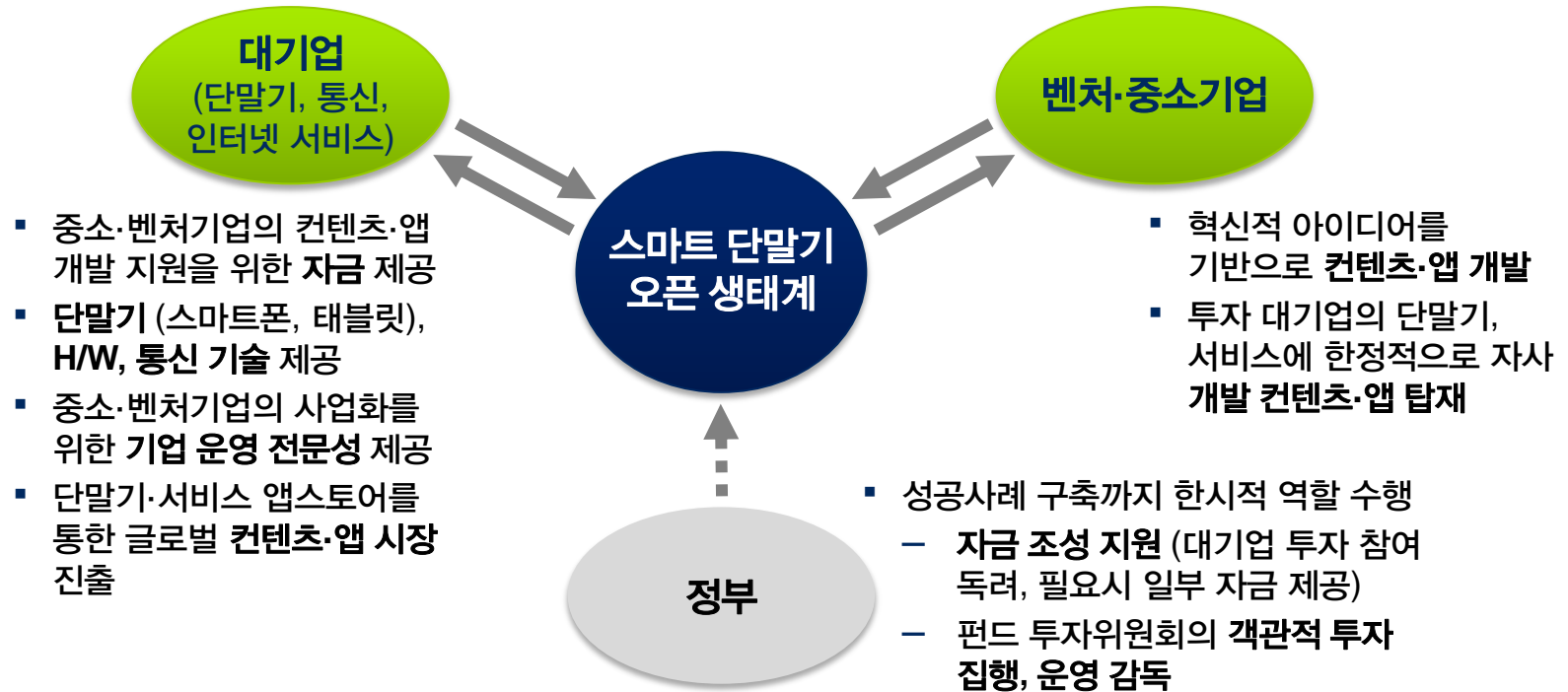
### 3 중소·대기업 공동 생태계 비즈니스 육성 – 협력 모델 (예시)



스마트 단말기

바이오 케미컬

기초 과학



현황 및 공동  
혁신의 필요성

- 콘텐츠·앱이 대기업 중심, 폐쇄 구조 하에서 개발되어 글로벌 경쟁력 미약
- 글로벌 시장 대상 최적화된 콘텐츠·앱 개발을 위해 대기업의 공동 기술 (단말기, 통신, 인터넷 서비스) 지원 필요

## 4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강화



### 현황 및 필요성

- 중소기업의 수출실적이 저조함
  - 총 기업 중 수출 중소기업 비중: 한국 2.7%, 독일 10.9% ('10)
  - 총 수출액 중 중소·중견기업 비중: ('01) 43% → ('11) 33%
- 중소기업 수출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마케팅 역량 부족이라는 지적
-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등 해외 진출을 통합 지원하는 '비즈니스 포털' 제공 필요

### 협력 모델 제언

#### 1. 중소기업 e-Marketplace 구축

- 기존의 관련 포털 서비스를 (KOTRA 운영) 보강하여:
  - A.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통로와 수출입 정보 허브화 및 수출입 관련 지원 기능을 통합 제공
  - B. 해외고객에게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접근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기업·제품 정보 제공
  - C. 국내·해외 기업 간 사업파트너를 찾아주는 비즈니스 매칭 플레이스 기능을 제공
- 정부/지원기관은 정보와 사업기회 제공이 One-stop으로 이루어지도록 포털 구축 및 운영 활성화

※ 해외 사례: 독일 경제기술부의 iXPOS

#### 2. 대기업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 시장 진출

- 대기업 무역상사를 통한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무역 대행
- 대·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해외 프로젝트 공동 추진

## 4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강화 – 독일 비즈니스 포털 사례



### 독일 경제기술부의 비즈니스 포털 (iXPOS)



- 독일연방 경제기술부 산하 독일무역투자청에서 운영
- 독립 운영되던 3개의 온라인 사이트를 단일 비즈니스 포털로 통합 ('12)

### 시사점

- e-Marketplace와 정보 제공 기능을 통합한 **One-stop 솔루션 구현**
  - 제휴, 공공개발 등 사업 파트너 소싱
- 정부 주도의 포털 서비스로 **정보 신뢰성 향상**
- 해외시장 주요 사업 기회 등 최신 정보 제공으로 **지속적 활용도 제고**



# 목차

- I. 창조경제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
  - 표적집단면접 (Focus Group Interview) 결과
- II. 창조경제 활성화 제언
  1. 민간 기업 선도의 창조적 협력 관계 구축
  2. 융합형 시범 프로젝트 추진
    - Korea Healthcare 3.0
  3. 국민 생활 속의 창조적 학습 활성화

# K-헬스 (Korea Healthcare 3.0) 프로젝트 개요



## ■ ICT를 활용하여 의료체계의 선진화 (국정과제)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 → K-헬스 3.0 프로젝트 추진

### 필요성

- 급격한 고령화 진전
- 주요 선진국의 IT+의료 융합 추세

### 장애요인

-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이해 관계 충돌
- 개인정보 보호문제

### — 미국의 e-Health Initiative (eHI) 사례

- 전자의료기록 (EHR) 교환 활동 적극 지원으로 (상당 규모 채택보조금 지급) 병원·진료의사의 EHR 채택률 현저히 증가
- 오바마 정부도 헬스 IT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

## ■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

- 10개 산재병원을 중심으로 추진 → 전국 5,500개 산재지정병원으로 단계적 확대  
→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사업 확산
- ※ 공단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의료계와의 복잡한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움

※ '08년 도입된 U-헬스 서비스만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. '10년 의료법 개정 시도는 무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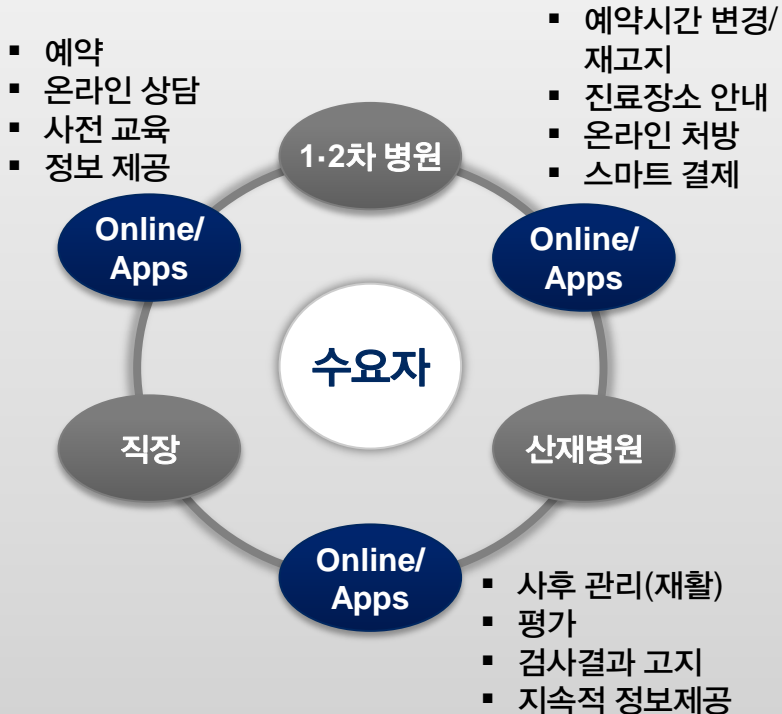
※ Korea Healthcare 3.0은 기존 Healthcare와 ICT의 접목에서 더 나아가 의료정보를 공유·통합하는 총체적 솔루션

#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 중심의 시범사업 추진



10개 산재병원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과 원무 및 환자용 앱 개발 보급을 통해 치료, 사후관리 및 예방에 이르는 의료서비스 전 단계에 혁신을 구현

산재지정병원 5,500개



\* 산재병원(10개): 인천, 태백, 창원, 대전, 안산  
순천, 동해, 정선, 경기, 대구

## 단기적 효과

- **환자:** 진료 대기시간 감축 및 진료 절차의 간소화, 맞춤형 종합 건강 정보 제공 가능
- **의료기관:** 진료 질 향상 (풍부한 자료 축적과 과학적 의사 결정), 고객센터 향상 (지표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)
- **정부:** 재정절감, 산재보험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

## 중장기적 효과

- 헬스케어 3.0 구현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
- 새로운 시장 및 전문직 일자리 창출
  - 건강정보 서비스
  - 헬스케어 콘텐츠 및 앱 개발
  - 관련 장비 등



# 목차

## I. 창조경제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

- 표적집단면접 (Focus Group Interview) 결과

## II. 창조경제 활성화 제언

1. 민간 기업 선도의 창조적 협력 관계 구축
2. 융합형 시범 프로젝트 추진  
– Korea Healthcare 3.0
3. 국민 생활 속의 창조적 학습 활성화

# 국민 생활 속의 창조적 학습활동 확산 – 개요



최근 확산 중인 학습동아리 등 국민·지역 중심의 평생학습 활동을 확산·체계화  
→ 창조적 학습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창조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정착

## 인적·사회적자본 제고

### 생활 속의 평생학습

지역 공공  
프로그램



본격적  
학습동아리

- 기업 활동
- 사회 봉사 활동
- 심화 교육

창조경제 원동력

- 평생학습참여율: (2008) 26.4% → (2012) 36.5%
- 최근 4년간 동아리 및 참여자 수 55% 증가\*

## 학습형 일자리\*\* 창출

[국정과제72]  
100세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 
실현 촉진

\* 2013.7월 현재 약 2,200개, 36만명 참여 (전국 35개 평생학습도시 등록 기준)

\*\* 학습형 일자리: 사회적기업, 지역사회 활동, 자원봉사 등 평생학습활동과 연계된 일자리 (지역문화해설사, 방과후학교교사, 시민강사 등)

학습동아리는 정규 평생교육을 보완하는 새로운 학습모형으로서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나  
아직 안정적 발전기반 취약 → 지역주민이 주도하되 인프라에 대한 정부 후원/지원 강화 필요

# 국민 생활 속의 창조적 학습활동 확산 – 전략과 과제



## (1단계) 학습동아리 등 지역 평생학습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성과의 공유·확산

### 학습공간 확보

- 유휴공간을 활용하고, 행복학습지원센터(읍/면/동) 등을 설치

### 전문인력 확보

- 평생교육사(시/군/구), 시민강사 인력 확보
- 마을평생학습리더 등 지역 학습동아리 리더를 위한 교육훈련과정 운영

### 성과 공유·네트워크화

- 각급 지역, 지자체, 국가 단위의 공동활동을 통한 성과 공유 및 확산  
\* 다양한 성격의 민간단체 주도 - 정부나 대중매체가 후원
- 유관기관·프로그램간의 연계 활성화 (시/군/구)  
\* 평생학습지원센터, 복지관, 도서관·문화관, 취업지원센터 등



## (2단계) 활동의 전문화, 제도화

### 사회봉사단체

- 자원봉사, 사회공헌 등과 연계한 재능기부 활성화

### 전문적 경제활동

- 사회적 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등으로 양성 (지역 대학, 직능공동체 등과 연계)

### 심화 교육활동

- 시민학교, 시민대학, 지역사회대학(Community college) 등으로 발전  
\*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학습이력 관리,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·학위 취득

# [참고] 학습동아리(Study Circle) 운동의 국내외 사례



## 해외 사례



### 스웨덴: Study Group

- 20세기 초 태동 → 70년대 ‘신문화운동’으로 활성화: 정치, 철학 문제 → 외국어, 취미생활 등 실용적 주제
-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스웨덴 학습협회 (ABF) 등 전국 11개 민간협회의 중심으로 운영
- 시민의식 함양, 전문직 학습형 일자리 창출, 문화산업 활성화 (스웨덴 사회변화의 원동력)

※ “싸게, 자발적, 평등참여” 원칙



### 미국: Study Circles Resource Center

- ‘89년 설립, 학교문제, 빈곤퇴치, 사회봉사 등 지역사회발전 중심 (‘08년 Everyday Democracy로 개명)
- Paul Aicher 재단이 전국 11개 민/관조직과 협력하여 운영
- 미국 전체: 90년대 이후 동아리운동 활성화/붐

## 국내 사례

### 남양주시: 근거리 접근권 실현

- ‘10분내 학습등대 - 20분내 주민자체센터 - 30분내 도서관’ 개념의 1·2·3 프로젝트 추진 (2011년)
- 주민기획·선발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시 평생학습센터는 주로 전문 및 시민강사 지원

### 시흥시: 세분화·전문화된 지원 제공

- 학습동아리 운동확산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, 인큐베이팅, 매니저 양성 등을 지원
- 동아리들의 연합활동(학습나눔장터)을 촉진하여 지역사회 이슈를 발굴, 문제해결을 위한 재능기부 유도 (예: 방학 중 자녀 체험학습 지원 등)

### 안산시: 노년층 학습동아리의 사회적 기업 진화

- 노인 컴퓨터 교육 이수자들을 중심으로 학습동아리 결성, 심화학습(동영상 편집 등) 운영
- 노인대상 컴퓨터교육 봉사활동(안산시는 교육활동공간 지원): 총 5천여명 교육과정 이수



감사합니다